



사간원의 언론 활동

조선왕조는 정치 운영 과정에서 언론 담당 관청을 별도로 둘 정도로 언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컸다. 요즘에는 신문의 독자투고란과 방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다양하다.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왕조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에서도 매우 광범하고 효과적인 언론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앙의 여러 관청 중 감찰 기관인 사헌부와 간쟁 기관인 사간원, 학술 기관인 홍문관을 합쳐서 '삼사'라고 하였다. 이들 기관은 조선의 대표적인 언론기관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언론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리하였다. 군주의 통치행위는 물론, 일반 관료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다.

이중 사간원의 직무는 왕과 관련된 현실 정치에 대해 실질적인 언론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왕의 통치 행위와 시정사 중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은 물론, 현실 정치의 시비득실, 잘못된 인사 문제까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사간원은 태종 1년(1401)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 낭사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독립되었다. 여기에는 우두머리인 대사간 1명을 비롯하여, 사간 1명, 헌납 1명, 정언 2명 등 모두 5명의 관원이 있었다. 설치될 당시의 사간원 임무는 헌납간쟁(獻納諫諍)·박정차제(駁正差除)와 수발교지(受發敎旨) 등이었다. 이후 독립기관이 되면서 문서 출납 업무는 승정원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기능만 수행했다.

사간원의 관리가 되는 자격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반드시 문과에 급제한 자 중에서 선발했으며, 본인에게 하자가 없어야 했다. 친가와 처가의 4조(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를 살펴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서, 강직한 언론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었다는 전제가 명확했다. 군주의 과실을 간쟁하거나 시정의 득실을 논하려면, 간언하는 사람부터 높은 학문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는 조선 지배층의 인식이 고려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정직성이 요구되었다. 자신이 바르지 않고서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거나, 백관의 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



격을 구비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적임자라고 생각되면 퇴직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직위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임명되는 사례가 있었다.

일단 간관이 되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분의 보장과 특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 예로 대간은 인사 고과(포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들이 당상관에게 인사하면 당상관들도 정중하게 답례를 해야 했다. 사헌부의 관원과 유사한 특별대우를 받았으나, 사간원의 관리가 더욱 극진했다. “사간원은 나의 과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 언론을 하니, 다른 관청과 비교가 안 된다. 마땅히 우대해야 한다.”라고 한 태종의 말은 사간원이 어느 정도 대접받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간관의 우대는 사헌부의 감찰(정6품)과 사간원의 정언(정6품)에 대한 대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헌부는 대사헌부터 지평(정5품)까지 대장(臺長)이라 하면서 감찰은 제외했으나, 사간원은 대사간에서 정언까지 모두 대장이라고 했다.

두 기관 사이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다. 동일한 품계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2품아문의 사헌부 감찰(정6품)이 3품아문의 사간원 정언(정6품)보다 상위계급이었다. 그러나 감찰을 수

행한 자가 정언에 제수되는 예는 있어도, 정언을 수행한 자가 감찰에 제수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성종 4년 정인지가, “정언은 임금의 좌우에 있으면서 시비를 논하니, 그 직임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정6품이었지만, 백관을 규찰하는 감찰보다 군주의 과실을 논하는 정언의 직책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사간원의 관리들은 사헌부의 관리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대우 외에 업무량도 적었다. 엄정한 근무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상하관 사이에 존비의 구분도 없었다. 심지어는 공무 수행 중에 음주를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다. 제도적이든, 관행적이든 간관에게 그러한 대우와 기풍을 허용했던 것이다. 다른 관료와 달리 기개를 살릴 필요가 있었고, 그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학계와 정계, 경제계와 종교계, 문화계와 예술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간원의 관원들과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도 사간원이 누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간관들이 견지하고 있던 기개와 강직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의무는 도외시 한 채 권리와 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역사는 언제나, 정확한 언론 활동이 무엇인가를 묵언으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